

홍콩 시위대, 美에 '홍콩 인권법안' 촉구 집회

송환법 반대 시위 격화 속

8일 美총영사관 앞서 열기로

美의회 6월 이미 법안 발의

중국 "내정 간섭" 강력 반발

'범죄인 인도 법안' (송환법) 반대 시위가 격화하는 가운데 홍콩 시위대가 미국 의회에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홍콩 시위대는 일요일인 오는 8일 오후 2시 주홍콩 미국 총영사관 앞에서 '홍콩 인권민주주의 기도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빈과일보, 명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홍콩 언론이 4일 보도했다.

지난 6월 초부터 이어져 온 14번째 주말 집회인 이날 집회에서는 미국 의회가 논의하는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미 의원들에 의해 지난 6월 발의된 이 법

안은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의 특별지위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홍콩은 중국과 달리 비자나 법 집행, 투자, 무역 등에서 미국의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

이 법안은 또 홍콩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한 데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한편, 미국 기업이나 개인이 이들과 금융 거래를 못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오는 8일 집회와 더불어 홍콩 야당인 공민당 의원 5명과 미국으로 건너가 민주, 공화 양당 지도부를 만나 이 법안의 통과를 촉구할 계획이다.

지난 2일부터 총파업(罷工), 동맹휴학(罷課), 철시(罷市) 등 '3파(罷) 투쟁'이 전개된 가운데 홍콩 경찰의 시위 강경 진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날에는 홍콩의 한 중등학교 정문 앞에서 동맹휴학 집회를 하는 학생들이 경찰이 추격하다가 한 학생이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이 학생은 이빨이 부러지고 입술이 찢어져 피가 흘렀다.

경찰은 비가 와서 땅바닥이 미끄러워 학생과 함께 넘어졌다고 해명했지만, 피해 학생은 경찰이 자신을 덮쳐 고꾸라졌다고

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홍콩 시위에서는 성조기를 든 시위대가 자주 눈에 띄고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 훼손 사건도 수차례 발생하는 등 강한 '천미 반중'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8일 집회에 앞서 7일에는 시위대가 홍콩 쇼핑물 등을 돌아다니면서 소비 자제(罷買) 운동을 펼치고, 지난 주말처럼 홍콩국제공항 주변의 교통을 방해하는 시위도 전개할 계획이다.

지난 2일부터 총파업(罷工), 동맹휴학(罷課), 철시(罷市) 등 '3파(罷) 투쟁'이 전개된 가운데 홍콩 경찰의 시위 강경 진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날에는 홍콩의 한 중등학교 정문 앞에서 동맹휴학 집회를 하는 학생들이 경찰이 추격하다가 한 학생이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이 학생은 이빨이 부러지고 입술이 찢어져 피가 흘렀다.

경찰은 비가 와서 땅바닥이 미끄러워 학생과 함께 넘어졌다고 해명했지만, 피해 학생은 경찰이 자신을 덮쳐 고꾸라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원노조는 평화로운 집회에서 경찰이 학생들을 체포하려고 시도했다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전날 홍콩 정부청사 인근의 타마르 공원에서 주최 측 추산 4만 명이 참여한 '3파 집회'가 열린 후 일부 시위대는 프린스에 드워드, 윙타이신 지역 등에서 산발적인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들이 한 시위 참가자를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머리를 세게 누르다가 이 시민이 기절하는 일이 발생했다. 주위에 있던 시민들이 경찰을 비난하자, 이 경찰은 곤봉을 휘두르며 후추 스프레이를 마구 뿌려댔다.

윙타이신 지역에서는 시위대 몇 명이 탄 버스를 경찰이 강제로 정차시킨 후 총기를 들고 3시간 동안 몸수색을 벌여 시민들의 큰 원성을 샀다. 이에 반발한 한 시민은 웃옷을 벗고 신분증을 경찰에 내보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기자들의 취재까지 차단하자 시민들이 모여들어 비난을 쏟아냈다. /연합뉴스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설명회 개최

한국 등 22개국 참가... "처리 방법 아직 못 정해"

일본 정부는 4일 도쿄 주재 외교관들을 의무성 청사로 초청해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오염수 현황 등에 관한 설명회를 열었다.

일본 정부가 다른 나라 외교관들을 불러 후쿠시마 원전 관련 설명회를 연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이다. 한국을 포함한 22개국에서 총 27명이 참가한 이 행사에서 일본 정부는 폐기가 진행 중인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계속 늘고 있는 '처리수' 처분 방법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지난 8월 9일 열린 정부 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처리수 처리는 풍평(風評·소문) 관점 등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를 포함한 복수의 정화설비로 처리한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부르고 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지난 8월 열린 정부 소위에 제1원전 부지 내의 처리수 저장 탱크가 오는 2022년 여름쯤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보고했다. 교도통신은 "오늘 설명회에서 소위의 결정 시기 등에 대한 질문이 나왔지만 해양 방출에 대한 우려와 항의 등의 의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결정 시기와 관련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소위가 결론을 정리한 후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정부가 최종적인 처분 방침을 정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日 고노 외무상, 블룸버그 기고문 한국 비난

"징용판결 수습, 한국 책임"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4일 블룸버그통신에 보도된 장문의 기고문을 통해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을 한국 정부에 돌리며 비난을 쏟아냈다.

고노 외무상은 '일본과 한국 사이의 진짜 문제는 신뢰'라는 제하의 기고문에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로 한일 관계가 경색되고 있으며, 문제의 핵심은 두 나라가 국교를 정상화할 때 했던 약속의 준수 여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수습책임을 한국 정부가 져야 한다고

주장 강변했다.

고노 외무상의 기고문은 한일 관계 악화 책임이 역사문제에 무관하게 조처를 끌어들이는 일본 정부가 아니라 한국 정부에 있다는 기존 주장을 모아 장황하게 서술한 것으로서, 일본이 국제사회를 향해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섰음을 보여준다.

그는 14년간의 협상 끝에 체결한 청구권 협정을 통해 한일 양국 및 양국 국민 간의 청구에 관한 모든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주장을 답습했다. 그는 한국이 협정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폐기한 것이 "양국이 지금 직면한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31일 송환법 반대 시위에 나온 시위 참가자들이 대형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그 뒤로 중국 인민해방군 홍콩 주둔군 건물도 보인다. (왼쪽) '범죄인 인도 법안' (송환법) 반대 시위대가 2일 홍콩 몽콕 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제압되고 있다. /연합뉴스

'아베 4연임 지지' 日여당 2인자 유임說... 개헌 발판 만드나

부총리·관방장관까지 핵심 3인

유임 통해 권력안정 추구할 듯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부총리(재무상 겸직)와 관방장관 외에 집권 자민당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까지 유임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치적 비원인 헌법 개정을 실현하기 위해 권력의 토대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인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는 오는 11일 단행할 개각과 집권 자민당 인사에서 니카이 간사장을 유임시키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아사히 신문

과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이 4일 보도했다.

보도 대로 인사를 하면 부총리, 관방장관, 자민당 간사장 등 정권의 핵심 3인이 그대로 유지된다.

2012년 12월 아베 총리 재집권 이후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계속 같은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베 총리는 이번 인사에서도 두 사람을 유임할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6년 8월 취임한 니카이는 간사장 연속 재임 기간이 3년을 넘겨 역대 최장을 기록한데다 80세로 고령이어서 교체론이 적지 않게 제기됐다.

하지만 2017년 중의원 선거와 올해 7월 참의원 선거 승리 과정에서 수완을 발휘하는 등 정권 내 공로가 있어 유임되리라는 관측도 있었다.

아베 총리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레임덕을 방지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정권을 운영하도록 부총리, 관방장관, 간사장을 모두 유임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헤게모니 다음에 소모되는 에너지를 줄이고 숙원인 개헌에 대한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니카이 간사장의 경우 아베 총리가

세 차례 연속 자민당 총재가 될 수 있도록 앞서 자민당 당규를 개정하는 데 앞장선 인물이다.

집권당 총재가 되는 것은 총리직을 유지하기 위한 사실상의 필요조건이다.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는 2021년 9월까지인데 니카이 간사장은 아베 총리의 4연임도 지지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니카이 간사장은 한때 지한파로 평가받기도 했으나 간사장 취임 후에는 역사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을 원색적으로 비판하는 등 아베의 강경 노선을 비교적 충실히 따르고 있어 그의 유임이 한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지는 명확하지 않다. /연합뉴스

오스트리아 빈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2위 멜버른·3위 시드니

오스트리아 수도 빈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뽑혔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4일 세계 140개 도시의 주거 환경을 평가한 연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빈은 작년 평가에서 7년 연속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는 명성을 유지해온 호주 멜버른을 2위로 밀어낸 데 이어 올해도 '1위 굳히기'에 성공했다.

평가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된 평가에서 빈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100점 만점 기준에 99.1을 얻었다. 멜버른은 빈에 0.7점 뒤진 98.4점으로 2위를 유지했다. AFP 통신은 빈이 올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뽑힌 요인으로 편리한 대중교통과 알프스에서 제공되는 신선한 수돗물, 다양한 문화 생활 등을 꼽았다.

3위는 호주 시드니, 4위는 일본 오사카, 5위는 캐나다 캘거리, 6위는 캐나다 밴쿠버, 공동 7위는 캐나다 토론토와 일본의 도쿄, 9위는 덴마크 코펜하겐, 10위는 호주 애들레이드 등이 꼽혔다. /연합뉴스



호남동 대원빌딩 총별 "특별분양"

높은 전용면적 75%

11,12층 천정고 6M

분양가 470만원 ~

환기 공조 시스템 완비

중앙 냉난방 시설완비

300대이상 주차공간

"추천업종"

1 **휘트니스센터, 레저스포츠 시설**

2 **특급 한방병원, 공공기관 사무실**

3 **일반/공유오피스 사무실**

4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분양문의 : (주)대원빌딩

062) 234-1233

위치 : 동구 천변우로 369 (호남동 23-2)